

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6. 11. 17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- 우리 경제·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 - 대외적으로 브렉시트, 유럽은행 건전성 우려에 더하여, 미국 대선 영향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 - 대내적으로도 내수·수출 부진, 고용시장 활력 저하 속에서 가계부채, 구조조정이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‘살얼음판’ 같은 현 상황에서,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“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응”이 필요합니다.
 - 분야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,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‘전화위복’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특히,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‘서민·취약계층 지원 문제’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
 -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,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·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,
 - 보다 전고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➡ 정부는 서민·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, 앞으로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빈틈없는 서민·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

2 그간 서민·취약계층 지원 노력

□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싶고, 또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바로 '서민·취약계층 지원'입니다.

□ 그간 정부는 ① 서민 금융부담 경감, ② 맞춤형 채무조정, ③ 자활·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, 3단계에 걸쳐 '서민금융 지원방안'을 마련·추진해 왔습니다.

① 저소득·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연 5.7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, '사잇돌 대출'을 출시* 하여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.

* 사잇돌 지원실적(11.16일): 은행 1,959억원(약 1.8만건), 저축은행 603억원(약 0.7만건)

- 또한, 「대부업법」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34.9→27.9%로 인하하여 서민층 이자부담을 약 7천억원 경감하였습니다.

- 영세·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도 큰 폭으로 인하*하여 연 약 6,700억원 수수료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.

* (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) 1.5%→0.8%, (연매출 2~3억원 이하 중소) 2.0%→1.3%

② 상환능력·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채무조정*을 통해 조속한 경제적 복귀를 유도하는 한편,

*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감면율을 50→60%로 확대, 기초수급자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감면율을 90%까지 확대

- 불법·과도한 채권추심 예방을 위하여 '추심 가이드라인 마련' 등을 통해 추심 규율체계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.

③ 나아가, 서민층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활·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, 재산형성 프로그램, 소액신용카드 발급*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.

* '15.7월 시행 이후 '16.9월까지 소액신용카드 총 3.3만장 발급 지원

□ 아울러, 이 모든 방안이 현장에서 원스톱·맞춤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'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'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

○ 서민금융 통합기구인 '서민금융진흥원'을 출범(9.23)하고, 전국 어디서든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33개 통합지원센터도 차질없이 구축해 왔습니다.

3 향후 대응방향

□ 그간의 적지 않은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, 서민·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.

○ 폭풍우에 대비하여 치마 끝을 단단히 동여매듯이,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'한층 튼튼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'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.

① 이를 위해서는, 무엇보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“일관성”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○ 지난 9월 발표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, 취약 채무자 원금감면 확대,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내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사잇돌 대출, 민간 서민금융회사,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중금리 대출 채널을 통해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.

➡ 유관기관도 분야별 지원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추진사항이 속도감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.

② 아울러,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, 정책 서민금융 전반의 적정성·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총체적인 재편방안’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그간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, 상품통합, 기능 보완,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.

○ 또한, 한정된 재원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청년, 한부모가족, 채무조정 탈락자, 탈북민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찾아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
③ 종합적·입체적인 자활·재기를 위하여 고용·복지 서비스와 서민금융과의 연계도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.

○ 궁극적으로 ‘소득창출을 통한 자립’을 위하여, 금융지원에 더해 일자리 연계, 사회안전망의 “패키지 지원 방안”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④ 마지막으로 12월을 “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”로 지정하고, 금융위(현장지원단)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“현장점검반”을 구성하여 서민·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밀착 점검하겠습니다.

○ 서민지원은 그 어떤 분야 보다 현장 중심으로, 일선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○ “현장점검반”은 단순히 현장을 돌아보는 수준을 넘어,
①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‘찾아가는 서비스’를 제공하고,
② 실제 현장의 애로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현장에서 수렴한 주요건의 및 검토결과 등 연말 보도자료 배포 예정

➡ 원활한 현장점검반 운용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여기 자리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4 당부말씀

□ 빈틈없는 서민·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하고 총체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,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① (진흥원) 우선, 서민금융진흥원은 통합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정보 집중, 이력관리 등을 위한 '통합 DB'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아울러, 각 지역지점 및 센터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, 중복된 인력·조직의 통합·재배치, 필요지역 신설 등 서민 금융 네트워크 확충에도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② (신복위) 신용회복위원회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선제적인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'법원행정처'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Fast-Track을 조기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③ (캠코) 자산관리공사의 경우, 진흥원과 최대한 협력해서, 국민행복기금의 재원·운영 전반에 걸친 공익성·공공성 제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④ (서울보증)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향후 추가 보증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아울러, 신복위 소액대출 보증, 채무연체 이력자의 취업을 위한 신원보증 등과 같은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⑤ (주금공) 주택금융공사의 경우, 서민층이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을 차질없이 지속하고,

○ 정책 지원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⑥ (신정원) 신용정보원은 신용거래 경험 부족자(Thin-Filer), 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적절한 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
○ 신용정보 등 기존의 평가지표 외에 '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결합분석' 등을 적극 지원·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⑦ (신용보증재단) 마지막으로,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에 대해 폭넓은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라 기대합니다.

➡ 앞으로 오늘과 같은 '서민·취약계층 간담회'를 정례화하여, 기관별 진행상황 및 대응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.

5 마무리 말씀

-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·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록 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.
- 저소득·저신용층에게 높은 금융 문턱을 낮추고, 이들의 자활·재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서민금융은 '안전망'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정부도 서민·취약계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서민금융 시스템 전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❶ 상환능력·의지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법을 개선하고, 다양한 상품 브랜드를 통합하는 등 정책 서민금융을 한 걸음 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.
- ❷ 지역·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·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도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오늘 여기 자리하신 분들께서도 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“여민동락(與民同樂)”의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참고

주요 서민·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

	주요 내용	추진 실적
1단계 서민금융 지원강화 ['15.6.23.]	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(햇살론·미소금융 등)	연 4.5조원 → 5.7조원으로 공급(목표) 확대
	법정 최고금리 인하 (34.9% → 27.9%)	최대 330만명, 총 0.7조원 이자부담 경감
	서민금융진흥원 출범 (서민금융 컨트롤타워)	미소금융·햇살론·바꿔드림론 통합 → '16.9.23일 진흥원 출범
2단계 채무조정 지원강화 ['16.1.28.]	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(신복위·행복기금 최대 원금감면율 50% → 30~60%)	연 약 7.6만명, 1,74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
	상환능력 결여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(원금감면율 최대 90%)	연 약 0.4만명, 총 28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
	은행권 공동의 '신용대출 119' 도입 (연체우려 고객 사전 안내·지원)	연 5.3만명의 연체 예방 효과
3단계 채무조정 채권추심 개선 ['16.9.26.]	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	미소드림적금 약 2천건 지원 소액신용카드 3.3만장 발급
	불법·과도한 채권추심 예방	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→ 1일 2회까지 채권추심 허용
카드수수료 인하	영세·중소가맹점 0.7%p, 대형 약 0.3%p 인하 (영세: 1.5 → 0.8%, 중소: 2 → 1.3%)	가맹점 수수료 부담액 연 약 6,700억원 경감
사잇돌 대출 출시	은행·저축은행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(총 1조원 한도, '16.7월~)	총 2.5만명, 2,562억원 지원 실시